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
3
제59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329 | www.council.jeu.kr ISSN 2671-9754

02/03

제380회 임시회 개회



04/07

주요 이슈



08/09

생생 의정활동



10/11

함께합니다



12

사무처 소식



한 달 지연된 올 첫 임시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 첫 임시회가 한 달 지연된 3월에 열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각 상임위원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 임시회 개회식 전경

“재난기본소득 제주도와 의회 숙의하자”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17일 개회해 24일까지 9일간 열렸다.

임시회에서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의됐다.

특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도정에 도입 필요성 검토를 제안했다.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많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함께 숙의해달라.”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제주 상황은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 전시상황으로, 어려운 제주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정 및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긴급한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숙고해줄 것으로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에 열릴 예정이던 제380회 임시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3월로 연기돼 개최됐다.



● 개회사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7일 오후 2시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최근 많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함께 숙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의 제주상황은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 전시 상황”이라며, “어려운 제주 재정에도 불구하고

“공존과 협력 통한 포용사회의 힘 요구돼”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

예산조정 및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긴급한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약자와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시기의 고통은 이 분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한 부모 및 조손 가정 등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 자칫 거리나 아이들 혼자 외떨어져야 하는 가정들에 대해 교육당국과 행정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상황으로 자금 대출을 희망하시는 많은 자영업자 및 기업들에 대한 조속한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 많은 사업자분들이 대출상당도 어려워 힘들어 한다고 한다.”면서, “빠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 이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학교가 개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 노동자 여러분들과 농수산물 공급자 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행정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의 단절일 것”이라며, “코로나19는 결국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혐오와 공포만 남는다면, 제주는 그간 이어온 수많은 공존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단절된 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듯, 공존

과 협력을 통한 포용사회의 힘을 더욱 단단히 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우리 제주도민은 반드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며, 존경하는 도민들께서 사회적 공존의 미덕을 보여주실 것”이라며 도의회의원들이 도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도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주제 정책차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외출, 경제활동 자제 등으로 임시휴직자 30% 증가, 노인일자리 50만개 감소, 소상공인들의 긴급안정자금 지급율도 아직 10%에 못 미치는 등 극도의 경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종의 재난수당으로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초강도의 경제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실은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난수당을 지급될 경우 제주 전체 가구수 약 23만(2017년 기준) 가운데 40%인 약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5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5분 발언

“제주관광 쇼크 상태, 희생방안 내놔야” 강민숙 의원,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강민숙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제주관광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원조건이나 자격미달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하는 영세업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은 3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희생방안 마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민숙 의원은 “제주도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공언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역 감염 확산의 가능성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제주관광은 쇼크상태나 다름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첫 확진자가 나온 날부터 현재까지 관광객 감소는 54.6%(내국인 -49.8%, 외국인 -93.0%)에 달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년동안 시행하던 무비자제도까지 중단 결정을 내릴만큼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공·숙박·식당·쇼핑·관광지에 이르기까지 경영상황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렸고, 관광과 연계된 도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골목상권, 도민 일자리까지 위협받으면서 그야말로 유례없는 경제적·사회적 재난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그 마저도 지원조건이나 자격미달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하는 영세업자들도 많다”며 현장의 안타까움을 전했다.

강 의원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은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첫 선포 사례로 국가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발빠르게 국가 추경에 맞춘 추경 준비, 재난기본소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이전부터 제주경제는 이미 빨간불인 상황이었고, 코로나19가 업친데 덮친격”이라며 “앞으로 경제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위기관리와 관광산업을 비롯한 경제희생방안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2공항 절차적 투명성 확보,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해야”

정민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인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2동)은 3월 17일 개최한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과 방법,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바로 시작돼야한다”면서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

적극 수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1년전 이 자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제주형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으며, 이미 전북 전주시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52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했다”면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가 균등한, 즉 재난상황에서도 생존의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부연했다.

또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 시킴으로써 도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되는 정책결정 과정이 되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필요

성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긴 하지만, 이것이 최종·완결적 종착역은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제주도의 예산 편성 행태를 보면 '선례가 없는 신규사업'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따라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험적 시도 또한 요원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도 분청 중심의 행정체제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면서 “더 나아가 계층 구조를 포함한 지방정부 형태, 선거제도 등을 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제주 제2공항 반드시 필요, 민주당 지금까지 뭐 했나”

오영희 의원,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미래통합당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3월 17일 “제주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2공항과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제주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

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이 추진된 지 몇 년째, 이제는 갈등해소라는 이유로 사업이 발목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집권여당 국회의원 출신 국토부장관, 세 분의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라며 “혹시 눈치를 보고 계신 건 아닌지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원동력이며, 이번이 제주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라며 “미래통합당은 제2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뜻에 따라 도의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도정과 협력하며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미래 첨단산업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하고, 제주특별자치의 고도화와 차별화를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함으로써,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4년이 지나면서 그 특색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역시 제주의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특례를 16개 타 시도로 전국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는 분야별로는 '보통 자치도'로 전락하거나 더 후퇴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원희룡 지사와 공직사회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투철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학생 비만·도박 문제 심각, IB, 외고 폐지 강행 안돼”

김장영 교육의원,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 김장영 의원은 3월 17일 제주지역 학생들의 심각한 비만과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차마 어디 내놓기가 부끄러운 각종 지표들이 있다”면서 “청소년 도박 위험 집단이 14.1%로 전국 평균 6.4%를 훌쩍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고, 학생

정서행동검사 결과 도내 관심군 학생이 5%대로 매년 1,300여명이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유례없이 다섯 명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비만율도 전국 대비 최고치를 보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표선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IB교육과정과 관련해 “IB 성적으로 국내 대학 진학이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장과 선생님, 학부모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까지도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감은 IB 교육과정 도입의 당위성을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 강화와 평가방법의 혁신에 두고 있다”며 “꼭 IB 도입이 절대적이었는지, 해당 학교 학생들을 외국대학에 진학시키겠다는 것인지, 학생들의 대입 등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혼란스럽고 교육

실험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과연 이런 행태가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특목고의 순기능에 초점을 두어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함에도 전국 최초의 성과를 내려는 듯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닫는 것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발생한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반복과 관련해서는 “불합격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서 묻혀버릴 사건이었다”면서 “이런 일이 과연 이번에만 발생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교원 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성토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개정조례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3월 17일 오전 제3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38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제379회 임시회 폐회 중 3차 회의를 열어 '제380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2월12일부터 20일까지 열기로 했던 제380회 임시회는 3월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예정됐던 381회 임시회와 일정을 합쳐 3월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3월 임시회에서는 통상 2월 임시회 때 진행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롯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며,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도 당초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등 11회에서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로 줄었고, 회기도 123일에서 115일로 8일이 줄어들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코로나19 대책본부 격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3월 13일 제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대응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제주도에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작은 방심 하나가 지역사회 전파라는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위원회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브리핑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다.

이상봉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제주시 노형동 을·더불어민주당)은 3월 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1년 3개월간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투자유치가 도정의 최우선 가치였던 200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와 지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개발사업의 위상과 정책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도민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행정사무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미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여전히 국제자유도시의 정의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데다 경제 성장과 낙수 효

과 측면에서 오히려 도민의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관리체계 구축 △도민 자본 육성을 후속연구 과제로 꼽으며 “학계 차원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이관작업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들은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특위는 자동 해산됐다.

2020년, 4·3의 완전 해결 위한 한 해 될 것

4·3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의원)는 3월 12일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재단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 4·3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4·3특별법 개정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4·3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방안’, ‘복합센터 건립 등 4·3평화공원 활성화 방안’등을 논의했고,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4·3 72주년을 맞이하여 성찰하고 참여하는 4·3평화·인권교육’을 주제로 하여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4·3교육에 대한 교원역량강화 및 4·3 평화·인권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4·3평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제주4·3 트라우마센터 운영계획’과 ‘4·3주가 진상조사 및 연구

사업’, ‘문화·교육사업’,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추진상황’, ‘세계화를 위한 추진상황’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4·3 72주년 추념식과 관련하여 심각상황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특위위원들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4·3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 인만큼 행정안전부와 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행사기간 중 방역대책반 운영, 격리공간 마련, 행사요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교육, 현장 진료소 운영 등 방역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했다.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3 72주년 추념식은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국적인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여러 상황을 설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



서,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제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만큼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방문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의결 한 달 만에 10% 삭감, 권한은 의회에 있다” 제3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코로나19 현안보고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3월 18일 제38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를 상대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은 “지난해 말 새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이후 한 달 만에 제주도가 예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며, “예산안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최악의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제주도가 오기를 부리며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집행한 도에 있지만, 삭감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2,7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한다. 향후 추가 세입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렇게 되니 10%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당장에 부족한 자원 마련 계획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현길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을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길호 의원은 “재난 이후 위기극복에는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때에 맞춰 정부에 요구하면 업무가 늦어져 요구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며, “위기를 기다리지 말고 제주도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실종자 조기 발견 위한 지자체 근거 마련

김항국 의원,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항국 의원(미래통합당, 용담1·2동·사진)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8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해 실태조사, 예방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및 무인항공기 지원 방안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색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항국 의원은 “이 조례안은 통해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국가경찰과 협조하여 지자체가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을 마련하여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항국 의원은 “타 시·도 중에는 실종자를 치매환자로 제한하여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상남도가 유일하나, 실종위험군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자살위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서 의미가 크다”며 “제주도 실종자 가정 없는 지자체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도내 실종아동 등의 발생 현황(18세미만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은 매년 5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아동 실종자 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와 정신 장애인 등의 실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 출산영향평가 개정조례안 등 심의 제주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안도 처리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가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 가운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의원)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제주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6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긴급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현안업무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추세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 집행부에서 보다 더 집중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회(제380회)를 취소하고 도와 도의회가 함께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현안보고회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자가격리자 관리대책 및 음압격리병상 적정여부,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 물량 확보 등의 비상방역대책 운영상황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 규정 마련

고태순 위원장, 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아라동·사진)은 제380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의하고, 18일 상임위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에 따른 예방·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

한 내용과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양 행정시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제주시 701명, 서귀포시 450명)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활동 참여 단원에 대하여 실비 보상차원에서 활동수당(4시간 기준, 20천원)을 조례 제10조제2항의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으나,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주의보가 발생했을 때 사전 예방 점검 및 사후 긴급 복구를 위하여 장시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시간 소집 대기하였다가 복구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활동시간이 4시간 보다 많음에 따라 조례안 제10

조제4항을 신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었을 때 방재단 임무 수행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고태순 위원장은 “태풍과 집중호우 재난 발생 시 사전 예방활동 및 복구 활동에 있어서 민간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개인 가정의 안전보다 지역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자율방재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세계의 유산 송악산, 아직까지 제도권 밖” 환경도시위·문화관광체육위 전문가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월 27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송악산을 통해 본 제주 자연문화유산의 가치인식제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악산을 포함한 주변 역사문화유산의 자연문화적 가치에 대해 보존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악산은 화산과 인간 그리고 자연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질학 기록으로 간직한 특이하고 유례없는 사례로 불릴 정도로 지질학적 가치를 높게 사고 있다.

또한, 제주도내 중요 지질사이트들 중 송악산이 가장

많은 국제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출간 논문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구글 검색빈도수에서도 높은 검색건수를 지니고 있어 그만큼 학계 인지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송악산 주변으로는 신석기시대, 탐라시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다양한 전적시설이 좁은 지역 안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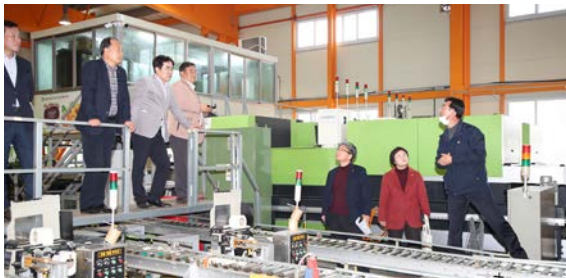
그러나 송악산을 비롯한 주변 문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호방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기획·추진한 환경도시위원회 이



상봉 의원은 “최근 많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중요한 자연문화유산들이 훼손의 위기에 놓여 있어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제주의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선 보호와 후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칠성영농 등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방문 제380회 임시회 의안 심사 관련 현장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에서는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을 현장방문했다.

첫째 날은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남원 감골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현장을, 둘째 날은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추진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을 듣고 향후 이루어지는 안건 심사시 좀 더 세밀한 환경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장은 “개발 사업이 불가피하다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하며, 현장 확인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돌하르방에 대한 가치인식 부족, 활용기회 있어야” 제주 돌하르방 보호 및 활용방안 모색 간담회

제주 돌하르방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3월 12일 의원회관에서 ‘제주 돌하르방의 가치인식과 보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돌하르방은 조선시대 제주의 삼읍성(제주, 대정, 정의)을 지켜주던 수문장이자 수호신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삼읍성에 현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돌하르방 48기 중 45기는 도지정 민속문화재 제2호로 지난 1971년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며, 미지정 된 3기 중 1기는 분실됐고, 2기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전시되고 있다.

돌하르방은 성곽 원형이 남아있는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의 성문에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제주읍성은 일제강점기에 음성철폐령에 따라 성곽이 훼손되자 원위를 상실한 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호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세계유산본부와 제주의 역사·문화 기행 등을 추진하는 (사)질토레비가 공동으로 참여해 돌하르방의 보호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호형 의원은 “제주의 돌하르방은 현재 열쇠고리 등 관광 상품으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돌하르방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한 감이 많다.”며, “제주읍성에 있던 돌하르방에 대한 위치 비정, 효율적 관리방



안 등을 통해 교육자료, 관광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연동굴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근거 마련 이승아 의원,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사진)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천연동굴의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공개해야한다”는 것으로 도내 천연동굴의 보호, 관리,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 골자이다.

익히 천연동굴은 정부에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눠 관리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인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따라 천연동굴을 관리해왔다.

문제는 제주도가 천연동굴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에 천연동굴이 관련되어 있으나, 정작 제주도민들은 그 현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조례는 제주도민이 지하에 있는 천연동굴 현황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도내 곳곳 산재해 있는 천연동굴의 보존과 활용, 관리방안을 수립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 발의 한 이승아 의원은 “제주의 천연동굴은 화산섬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제주도 지하에 묻혀 있는 비지정 동굴의 유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천연동굴의 가치에 대해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제정조례는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흥경환, 강철남, 고은실, 좌남수, 이상봉, 이경용, 강성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코로나發 경제 ‘최악’, 개점휴업에 ‘실직’ 급증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도 관광업이 초동화된 것을 비롯해 전 업종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무급휴직 및 감원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중 제주지역 업황은 1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3월에는 더욱 악화되면서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이틀째인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희호 의원)에 보고한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2월 제주지역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업황 BSI는 '41'로, 200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업황BSI(65)와 비교해서도 무려 24포인트 하회하는 수준이다. 업황BSI는 100보다 크면 긍정응답이 부정응답보다 많음을, 100이하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주도내 7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월 BSI는 '35.7'로 1월과 비교해 무려 37포인트 하락했다. 제주도내 47개 전통시장 업체를 대상으로 한 BSI는 1월보다 51.1포인트 낮아진 '21.3'로 조사됐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3월 20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4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 연구교수(60)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황 내정자는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장 및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원장을 역임한 후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서울과학기술대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찬성 및 반대주민 의견 수렴 과정 필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예정지 답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희호 의원)는 2월 17일 서귀포시 대정읍 종일리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예정지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376회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일부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으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업자인 대정해상풍력발전(주)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지난해 12월 17일에는 대정문화체육센터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과 친환경성, 지역 주민 보상지원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대정읍 동일리 해상 5.46㎢에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등 전체 100MW 발전설비 규모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12년 서귀포시 대정읍 5개 마을 29㎢ 해상에 200MW 규모로 추진하던 중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2015년 3개 마을에서 지난해 1개 마을에



100MW 규모로 축소됐다. 사업 축소후 지난해 도의회에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상정됐다.

교육위원회

코로나19 계기로 교육현장 제도 정비하라

도교육청 현안 듣고 대책본부·재난안전상황실도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의원)는 3월 18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도교육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세 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시백 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며 “장기간에 걸친 수업공백 때문에 우리사회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학습’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내달 6일까지 약 한 달의 교육 공백 기간이 생겼음에도 집행부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교과서를 나눠주는 것에서부터 e학습터 운영까지 집행부가 파악하는 한편 이번을 계기로 e학습터 이용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또 최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두 번째 의제로 선정된 제주외고 전환 모델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책본부와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현황 청취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시백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 현황, 학사운영 후속조치, 대책 방향을 청취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재정 관리의 효율성 확보, 기금 조례 손질

김희현 의원,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운용조례 개정안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기금이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청 사무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교육기관 설립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희현 의원은 특히 올해 총 시설사업비가 2,863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지만 이

예산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애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 강철남, 강성민, 고은실, 김경미, 김장영, 부공남, 양영식, 오영희, 홍명환, 현길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다.

생생 의정활동

역사자원 보존활용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지정근거 마련 정민구 의원,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삼도1동·2동·사진)이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를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제주에는 항몽유적과 4·3사건을 비롯한 일제 전적시설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역사적 암울

한 사건들이 도내 전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일부 부서에서는 4·3사건, 일제전적시설을 중심으로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도내에서 일어났던 과거사와 관련된 사건 발생 현장을 찾는 방문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다양화 등 질적인 발전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다크 투어리즘은 후세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역사기억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또 다른 문화관광상품으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제주의 역사자원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관광 상품으로 가져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 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발의 된 다크 투어리즘 조례는 비록 부정적 장소·자산이지만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상생과 평화, 인권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는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승아의원과 현길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감염병 예방 및 위생교육 강화, 마스크 구입 명시 강성민 의원, 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사진)은 3월 6일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2건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총력대응책을 주문했다.

강성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은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첫째, 제주도는 지역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 그리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둘째, 도의회는 3월 회기 중 긴급히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셋째,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과 의료진 및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에서 실질적인 감염병 교육이 이루어지고, 관련 위원회에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것을 명문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급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교육이 감염병과 위생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생 안전교육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7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앞으로 사고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교육과정 속에 감염병 예방과 위생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2019년 기준 326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다.

강 의원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총력 방역체제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난안전기금인 경우 7억1,800만원(3월 3일 기준)을 사용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방역복, 소독약품 살포기 등을 구입했고, 이 중 마스크는 약 2억원 정도인 총 24만5천 장을 구입해 지난 2월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포했다”며, “하지만 도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당국이 대처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송영훈·강성민 의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사진)과 강성민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2월)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만약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시 지하도상가(382개소), 한림중앙상가(36개소) 등 약 418개소 이상, 약 5억원 이상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송영훈·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민간임대 영역까지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조례 제29조제9항에 따라 2020. 3. 9~2020. 12. 31까지 사용료(대부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는 중이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 일자리 워킹그룹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대순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경미 의원(사진 오른쪽)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이 3월 23일 출범했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로 일자리 정책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증가하고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위에서 지원이 대부분이다.

이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호응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에 도내 취약계층과 일자리 정책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은 향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 특강,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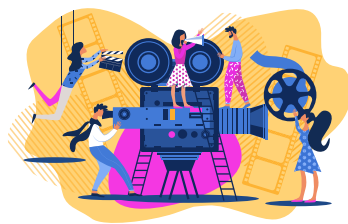
도민 여러분과의 소통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토론회

제주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집니다. 전문위원실별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의 활발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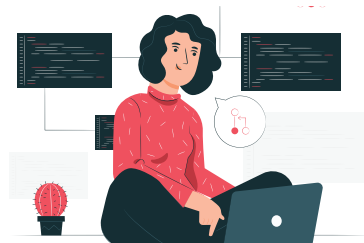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폐회식, 상임위원회별 회의상황,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생중계 및 녹화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회의록 열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교육행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영상을 회의록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주의 주요 이슈를 담은 계간 '드림제주21'과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월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와 계간지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 064-741-2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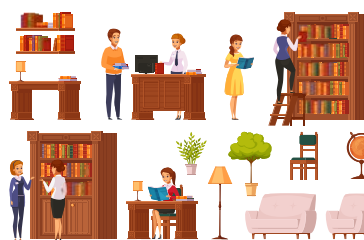


드림제주21 등 소식지 발간

의정자료센터

의정자료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전 행정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각종 정책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 열람 및 대출, 정책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문의 :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064-741-2305





목련철

박승자

맛있는 것을 아껴 먹은 버릇이 있어
불 켜진 백열등 같은 환한 봄을, 조금씩 뜯어 먹네

옴폭 뒤꿈치가 파인 신발 위에 또 신발이 겹쳐지네
고만고만한 신발 중에도 유독
작은 문수 한 짝을 집어 들며

가볍다, 보드랍다
전족을 한 버선발처럼

밤눈이 내린 마당
찬장 쌀밥에 난 생쥐 발자국처럼
달빛도 환한 백열등처럼 희디희기도 해라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맨발은 공공 언 찬밥 덩어리
눈 내리는 창을 항상 바라보고 계셨지
왜 북쪽으로 창을 내셨어요
웅얼웅얼 잠꼬대처럼 어린 나는 夢問을 한다
누에고치처럼 이불을 둘둘 말며
그녀의 夢遊를 애써 외면하면

북쪽으로 간 사람을 기다리는 자세란다
라는 답을 듣는다

한바탕, 창틀이 흔들리고
샤락샤락 희디힌 소리
마루 끝에 얽어져 있던 하얀 고무신 위로
눈나비를 한 송이, 한 송이 날려 보내며

난 맛있는 것을 아껴 먹은 버릇이 있어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고무신 위의 나비잠을, 북쪽 창을, 폭설이거나 광풍한 바람을
목련철, 나의 생 동안 조금씩 뜯어 먹었다네

봄밤을 밝히는 꽃, 목련이다. 누구를 향한 그리움인지 처연한 슬픔이 허공에 잔란히 떠 있다. 하늘거리는 흰 꽃잎은 그렇게 우리의 봄을, 밤을 짝 채운다. 하지만 목련은 너무 빨리 왔다가 우리 곁을 떠난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아껴 먹은 버릇'은 목련의 아름다움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목련에 대한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문수 한 짝', '전족을 한 흰 버선발', '찬장 쌀밥에 난 생쥐 발자국처럼', '달빛도 환한 백열등처럼 희디희기도 해라', '북쪽으로 간 사람을 기다리는 자세', '샤락샤락 희디힌 소리', '눈나비' 등은 목련꽃의 외면과 내면의 적절한 조화를 이끌어낸 비유다. 사물을 오래 들여다본 통찰이 느껴진다. 목련이 시가 되는 순간 목련은 이미 목련을 벗어난 다른 무엇이 된다. 그 무엇이 목련이기도 하면서 아니면서 생의 문

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목련은 또 하나의 삶이고 우주다.

목련나무 한 그루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지 그래서 백야다. 목련을 그대로 풀이하면 '연꽃처럼 생긴 나무'라고 할 수 있다. 하얗고 커다란 연꽃잎이 허공에 떠 있는 모습이다. 목필화(木筆花)라고도 부르는데 꽃봉오리가 붓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 시에서 '북쪽으로 간 사람을 기다린다고 한 것은 아마 꽃봉오리가 북쪽을 향해 있는 데서 비롯된 비유다. 북쪽은 겨울이면서 추운 마음이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만 봄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김수로왕이 인도의 아유타국 공주인 허황옥을 찾기 위해 목련으로 만든 키를 잡고, 계수나무로 만든 노를 저어 그들을 맞아들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져 온다. 목련꽃이 피어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이들을 황홀로 물들였는지 알만

하다.

아름다운 것은, 그리운 것은 우리 곁을 너무 빨리 떠난다. 어쩌면 그래서 더 아름답고 그리워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목련은 어느새 '눈나비'가 되어 훨훨 우리 곁을 떠난다. '눈나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꽃잎 하나가 떨어지네/어, 다시 올라가네/나비였네!'라는 하이쿠가 떠오르기도 한다. 눈과 나비를 합쳐놓은 '눈나비'가 어느새 어름어름 우리 곁을 날아다니는 듯하다. 이제 곧 목련철이 온다. 그렇게 천천히 음미하며 목련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뜯어먹어 보자.

글 김효선 / 시인

청탁금지법 Q&A



Q

민간 업체에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해 소방시설(소화기등) 배부 및 설치를 관할 소방서에 위탁하고, 소방서에서는 위탁 받은 소방시설(소화기에 기증자 표기, "증. ○○주식회사")을 잠시 보관하면서 위탁자의 의도에 맞게 대상자 선정 및 설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소방시설에 위탁업체와 소방서 공동명의로 소방시설을 소외계층 대상자(민간인)에게 설치(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나요?

A

소화기등이 소방서에 귀속 또는 기부되는 것이 아니며, 소방서는 단지 이를 소외계층(민간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업체와 소방서가 소방점검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소방서가 지원대상의 선정 등 단순한 '전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화기등 제공의 공익적 목적, 공정한 지원대상의 선정, 소화기등의 최종 귀속주체,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부합하거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만, 소방서가 민간업체에 소화기등 제공을 부당히 요구 하였거나, 소화기등 제공으로 소방서와 민간업체 관계에서 직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기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15일	정례회 2회/41일, 임시회 8회/74일
3월	제380회 임시회	3.17.(화) ~3.24.(화) (8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81회 임시회	4.16.(목) ~4.29.(수) (14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82회 임시회	5.14.(목) ~5.20.(수) (7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6.15.(월) ~6.25.(목) (11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84회 임시회	7. 1.(수) ~7. 3.(금) (3일)	· 하반기 원구성
	제385회 임시회	7. 13.(월) ~7. 23.(목) (11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8월			
9월	제386회 임시회	9.16.(수) ~9.22.(화) (7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87회 임시회	10.13.(화) ~10.29.(목) (17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388회 제2차 정례회	11.16.(월) ~12.15.(화) (30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1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389회 임시회	12.17.(목) ~12.23.(수) (7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함께'라는 꽃을 피워야하는 계절



코로나 19사태 이후, 봄꽃이 만발한 봄날의 나들이는 꿈이 되어버린 듯, 그런 봄날입니다.

야속하게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작년과 비교해 깨끗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염의 수치도 줄여 놓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아래, 사람들은 제각각의 방식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서로가 한 공간에서 맛난 음식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코로나 덕분에 가족애가 좋아졌을 지도요.

멀리 떨어진 가족, 친구에게도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건

강과 일상을 응원하겠지요.

하지만, 이사회에는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이라는 슬로건은 어떤 의미로 다가설까요?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강의로 인한 온라인 강의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들과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지역 공동체'라는 주제 아래 여러 생각들, 의견들은 이 사회 안에 가장 가난한자, 가장 홀로인자, 가장 신체적, 정신적으로 외로운 자들에게서 출발 하길 바랍니다.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소외 되지 않음'을 실현하고 현대시대와 미래세대

가 행복한 제주 만들기는 '함께'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깨달음의 혁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육체적으로, 어떤이는 정신적으로, 나머지는 감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의 글처럼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서로 협력하여 코로나 19사태를 이겨내고 새로운 일상을 꽃 피워야 합니다.

오로지 나만의 건강이 아닌 나와 너, 우리, '함께' 건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길 바랍니다.

이금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음부즈맨

숲가족님과 더불어, 숲과 더불어



침병침병 물을 튀기고 숲을 거닐며 느끼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훨씬 즐거웠으며, 침묵하듯 고요한 숲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듣는다고 했다.

화가 나 있고 우울해하던 아이들이 숲에 다녀오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것을 자주 본다면서 숲에 가면 아이들 표정부터 행복하게 바뀐다고 했다. 아이들이 신체능력 뿐 아니라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 학습태도 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선진국 숲 교육자들은 숲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동 청소년의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숲은 신체와 정신을 단련시키는 또 다른 학교다. 아이들이 국어, 수학을 배우는 대신 매주 숲에 뛰어나와 뛰어놀며 교육을 받는다.

숲을 누비며 도랑을 따라 물을 튀기며 걷거나 비스듬히 누운나무를 기어오르고 모닥불을 피우고 나무 자라는 법을 배운다. 매주 1일은 학급별로 숲에서 보내는 학교 풍경이다.

최근 어느 일간지에 게재된 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숲교육 이야기다.

덧붙여, 해가지지 않는 먼 나라 그 영국에서는 2017년부터 학교내 자체적으로 숲교사 여러명을 두고 재학생에게 정규교과과정 하나로 숲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숲의 기능과 역할부터 나무를 심고 꺾질을 벗기는 방법, 동물, 곤충 은신처를 만드는 법 등을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숲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숲학교의 목표라는 것이다.

학교별 자체적으로 숲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숲교육전문기관과 외주교육을 맺고 숲교육을 제공한다.

아동 청소년교육이 실내에서 받는 교과교육에만 치우쳐 있다는 반성이 나오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숲학교 교사 네트워크인 숲학교협회에 등록된 교사수는 1800여명에 달한다.

영국에서 숲 교육은 아이들 뿐 아니라 노년층이 겪는 사회적 문제 등도 해결해주고 있다.

활동장소는 지자체에서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도 영국처럼 산림교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법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중 산림이 약64%로 세계적으로 녹화에 성공한 나라지만 녹색교육은 걸음마 단계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이 유네스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세계 환경허브로 갈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숲을 활용한 녹색교육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주생명의 숲 국민운동은 "숲을 살려야 제주가 산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숲과 환경을 지키는 숲 보안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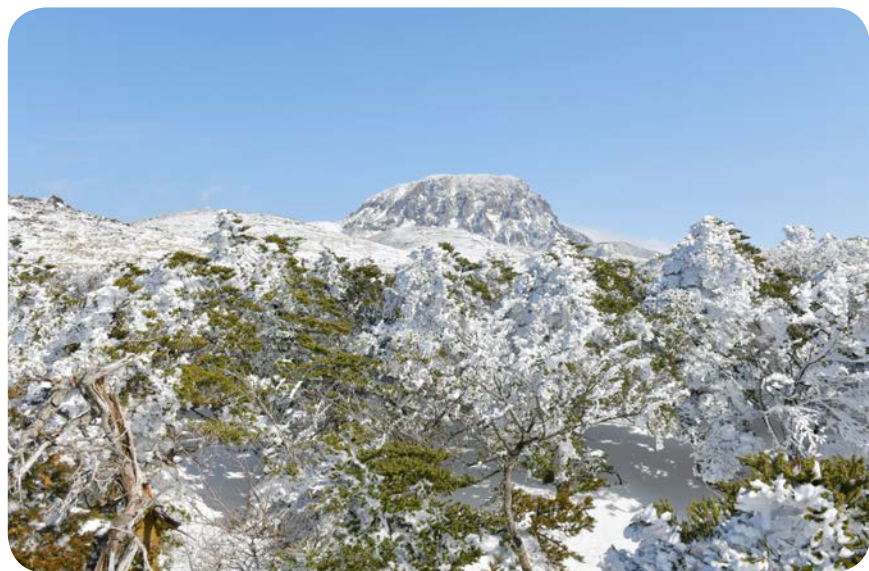
아울러 시민들을 위한 그린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씨앗심고 숲을 가꾸며 삶을 즐기고 건강을 지키는 체험활동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다.

온 도민이 더 후원하고 함께 나서주시길 기대해본다.

고윤권
/ (사)제주생명의숲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

포토뉴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만난 제주의 눈

봄기운으로 가득한 제주에 불과 며칠 전 눈이 내렸다. 2월 18일 안덕면 사계리 바닷가에서 바라본 형제섬(사진 왼쪽)이 눈과 안개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어 19일 찾은 한라산 영실코스 영실기암(사진 오른쪽)에서도 소복이 내려앉은 눈이 봄 햇살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다. / 미디어팀 신용덕

희망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희망제주(대표 오영희 의원)은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희망제주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치료 중이며,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희망제주 소속 의원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이후 원희룡 도지사와 면담 시간을 가졌다. 희망제주 소속의원들은 면담 자리에서 도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도내 관광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희망제주 대표 오영희 의원은 “지역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을 위해서 도청 및 시청부터 부서간 점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고, 도청 구내 식당을 요일제 운



영 계획을 세워 인근 주변 식당이 활성화에 도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희망제주는 미래통합당 의원(오영희, 강충룡, 김황국, 이경용, 강연호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 2일에는 대한적십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방문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플라워버킷챌린지 운동 동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김태석 의장)는 3월 4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에 ‘플라워버킷챌린지’의 일환으로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플라워버킷챌린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도내 단체모임과 졸업식, 입학식 취소 등 각종행사 취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화훼업체를 돕기 위한 화훼 소비촉진 릴레이 운동이다.

김태석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코로나19 위기극복 단체헌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혈액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2월 25일 의원회관 앞 주차장에서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

김태석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들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이날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위기극복을 위해 다중집합 행사와 모임을 당분간 자제키로 했고, 대구지역 출장은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난 20일부터 방송매체를 통한 공익 캠페인 광고방송을 진행 중이며, 도의회 LED 전광판을 활용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등도 병행하고 있다.



김태석 의장은 “단체헌혈 참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에서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솔선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적극 검토해야" 정책연구실, 정책차롱 제9호 발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3월 16일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한 정책차롱 제9호를 발간했다.

연구실은 정책차롱을 통해 현재의 소비둔화 추세는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직 등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므로, 생계유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급감과 소비부진이 이어지면서 도·소매, 숙박업, 식당 등에 여파가 미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난수당은 제주도내 전체 23만 가구 가운데 전체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약 9만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소요 예산은 45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정책연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그것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주민복지를 위해 조례를 통한 실현은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아래 기본소득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전국적인 시행을 가능케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여는
좋은 시너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만들어 내겠습니다.